

I . 교 육

1. 일제의 교육정책
2. 민족교육의 정비
3. 민족교육운동의 전개
4. 민족교육의 수난

I. 교 육

1. 일제의 교육정책

일제의 교육정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식민지 교육정책이다. 본래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초로서, 국민교육은 국민국가 건설의 기반인 것이며,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사회건설의 기초인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시대의 교육정책은 한국을 식민지로 개편하고 한국인을 식민지인으로 창출하기 위한 식민지교육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더 나아가 한국인을 일본인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제 식민지통치는 소위 한일합방에서 3·1운동까지의 무단통치기와, 3·1운동 이후의 문화정치기, 그리고 1931년부터의 대륙 침략기치화 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단통치기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의 기초작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원료공급기지과 상품소비지로의 편성을 진행하는 시기였다. 문화정치기는 거족적인 항일 투쟁을 겪고 난 후 한민족에 대한 통치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추진된 교활한 식민지 정책이 실시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정치라는 미명하에 민족분열을 획책하면서 수탈을 강행하였다. 친일인사의 육성 등 교활하고 악랄한 분열통치를 실시하면서 산미증식을 통해 수탈을 더욱 강행하였다.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제는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족성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침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민지 교육정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시에 전환되었으나 기본 틀은 변함이 없었다. 그 기본 틀은 한국인에게 식민지 체질을 형성시키면서 식민지정책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인데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로는 우민화 정책이다. 즉 구교육문화를 온존시키고 신교육의 발전을 저해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을 억제하여 한국인을 우민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실용적 사역인 양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민족교육의 온상인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었다.

1)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성격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 교육정책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식민지 지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방침은 전체 일제지배기를 통해 변함이 없었다. 다만 식민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정책도 변화했을 뿐이다.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 법령은 <조선교육령>으로 1911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즉 1922년과 1938년 그리고 1943년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1922년의 개정은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치의 실시 때문에 있게 된 것이고, 1938년에는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불리해지자 강력한 국가적 목적에서 1943년 다시 개정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무단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제가 감행한 무단통치시기는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닦으려고 한 단계로서 특징지어진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강점 초기부터 조선에서의 노예교육을 식민지통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내세웠다. 일제가 추구한 식민지 노예교육의 기본 목적은 조선사람들을 ‘우민화’하여 식민지 정책에 순응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조선민족을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데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11년 8월 23일에 칙령 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한국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교육이 담당했던 역할은 특히 중대하다. 그것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근본방침이 ‘동화정책’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그 본질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의 아류화하는 것에 있었

기 때문이다.

〈교육령〉이 ‘병합’보다 1년 늦어진 것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반도 통치의 성쇠가 좌우되는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총독정치를 반도에 선포함에 있어 가장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 ‘국가 백년의 대계’를 짚어준 〈교육령〉의 본질은, “교육은 특히 덕서의 함양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에 역점을 둠으로써 제국신민의 자격과 품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¹⁾는 조선총독의 말 속에 담겨있다.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교육령〉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제2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지능을 주되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는 국어(일본어를 말함)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이 〈조선교육령〉에서 규정한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의 육성’과 ‘국민의 성격’을 기른다고 한 것은 조선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할 식민지 노예교육의 근본방향을 밝힌 것이다.²⁾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일제는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실업학교규칙〉, 〈사립학교규칙〉 등을 제정·공포하고 계속해서 〈전문학교규칙〉(1915), 〈개정사립학교규칙〉(1915), 〈교원시험규칙〉(1916), 〈서당규칙〉(1916), 〈교원심독〉(1916) 등 교육에 관련된 법령과 규칙 및 통칙을 제정하고, 이들을 근거로 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교육정책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였다.

1910년대의 일제 초기에 있어서 식민지적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본제국주의가 내세운 식민주의 교육정책은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의거하여 일본인 통치의 총량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천황제사상의 주입이 필요했고, 일본의 제국신민다운 자질·품성을 구비하는 것이 제1의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은 필수요건이었으며, 실용교육 역시 일본제국주의의 산업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교육이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일본이 한국에서 추진한 식민지화 교육정책

1)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1935).

2) 박득준, 《조선근대교육사》(한마당, 1989), 203쪽.

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한국인을 일본제국에 적합한 소위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은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소위 ‘제국신민의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조선교육령〉 제1조)고 천명한 바와 같이 이른바 충량한 국민의 양성이 일본이 취한 대한국 식민지화 교육의 기초였다.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서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운 충량한 국민이란 한국인을 그들의 천황과 일본제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절대 복종하는 양순한, 즉 무기력하고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노예적인 隸民을 말하는 것이었다.

둘째,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한국인의 우민화를 꾀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삼기 위한 예비조치의 하나로 한국인을 우민화하기 위해 한국인에게는 가급적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기본방침에 따라 소위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표방했다. 그것은 한국인 학생에게 일본국민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알리는 일과, 저급한 노동자로서 즉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노무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저급한 실업교육을 시키겠다는 우민화교육, 민족적 차별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기본방침은 제도상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시키고 행정적으로 보통학교 교육을 위주로 하는 현실적 조치로 나타났다. 즉, 일제는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 아래 종전의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킨 것을 비롯하여 고등보통학교 4년(여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년 또는 4년이라는 단축된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인에게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전체적으로 단축시키고, 저급한 초등교육을 확장하여 한국인을 그들이 부리기 좋은 일본의 속국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셋째,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저급한 근로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내지

3)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294~296쪽.

직업교육을 강화토록 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교육방침에 따라 한국인을 저급한 노동자로 육성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저급한 실업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실과교육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넷째, 일본어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일본어를 보급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말과 문자, 그리고 한국의 민족문화를 말살하여 그들이 표방한 이른바 황국신민과 충량한 국민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말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타민족에게 강요하여 한국민족을 동화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이었다.

일본은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글을 조선어라 표기하는 대신 일본어를 ‘국어’로 표시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교육의 목적을 일본어 보급에 두었었다. 그리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일본어의 비중을 가장 높게 하였다. 즉 보통학교에서는 주당 총 교수시간의 5분의 2를 일본어에 배당하고,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주당 7시간씩 배당하였다.

조선총독은 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권을 비롯하여 교과도서의 편찬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교육행정을 전담하였고, 교육행정기구로는 조선총독부에 학무국을 두어 소관의 교육행정사무를 관장하였다.

2) 제1차 <조선교육령>과 식민지 교육제도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학제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학제는 학교의 계통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고 그 수업연한을 짧게 하며, 교육내용을 극히 실용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일본은 소위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일본의 학제나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학제에 비해 열등한 학제를 마련하여 한국인에게 가급적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국 일본이 <조선

교육령》을 통하여 제정한 한국인의 학제는 교육수준이 낮고, 교육연한이 짧으며,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간이한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교간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⁴⁾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으로 하고, 보통교육기관으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을 설치하여 일본제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성 함양과 일본어의 보급에 치중토록 하였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에 있어서는 독립된 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관립의 남녀고등보통학교에 교원속성과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실업교육기관으로는 농업학교·상업학교·공업학교·간이실업학교를 두고, 전문교육기관으로 법률·경제·의학·농상공업 등에 관한 전문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⁵⁾

이에 따라 일제는 각급 학교를 개편·설치하였다. 그러나 전문학교는 19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개편 설치되었다. 또한 초등교육 양성을 위해 한성고등보통학교와 평양고등보통학교·한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의 관립 남녀 고등보통학교에 교원속성과 사범과를 두고, 임시 교원양성소를 한성고등보통학교와 한성고등여학교에 부설하였다.

교육체계에 따라 민족차별의 한국인보통학교는 4년제, 일본인소학교는 6년제로 규정하였으며 중등학교에서도 한국인 고등보통학교의 연한은 4년간으로 그것도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연한은 3년으로, 일본인중학교는 5년간으로 구별하여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인 자제들의 초등 및 중등 교육기간은 8년제로, 일본인들의 초등 및 중등 교육기간은 11년제로 되었다. 일제가 이처럼 같은 초등 및 중등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학교와 일본인학교와의 차이를 엄청나게 둔 것은 식민지적인 차별교육을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일본인들에게는 지식수준을 더 높게 하여 식민주의자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반면에 한국학생들에게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⁶⁾

4) 정재철, 위의 책, 300쪽.

5)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조선교육요람》(1915), 17쪽.

식민지 노예교육체계에 의한 민족적 차별은 민족별 초등교육기관수와 재학생수의 대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11년 현재 한국에는 1만 7,884명의 재학생을 가진 134개의 일본인소학교와 2만 4,537명의 재학생을 가진 204개의 한국인보통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총인구의 96%가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4%가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실로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였다. 이러한 차별은 같은 해에 일본인 취학기아동의 100%가 소학교에 취학하였는데 대하여 한국인 취학기아동은 겨우 1.7%가 보통학교에 취학한 데서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식민지 교육정책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간이실용주의교육이었다. 간이실용주의교육은 한국인의 민족의식 성장을 억제하고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식민지노예로 부러먹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용적’ 기능을 양성하는 노예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교육체계에서는 학생들이 4년제 보통학교를 거쳐 2~3년제의 간이실업학교를 나오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있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식민지적 직업교육을 통하여 값싼 노동력을 양성하는 체계였다.

간이실용주의 교육체계에 의하여 6세에 6년제 소학교에 입학하는 일본인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학생들은 8세가 되어서야 4년제 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있었다. 일제는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한국학생들을 전문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이 시기 각급 교육기관에 있는 일본인 교원들은 군대와 같은 제복을 입고 교단에 나섰다. 제복을 입은 자들이 학교교원으로 나타난 것은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제도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3)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탄압

일제는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

을 감행하였다.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시 청소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반일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거점이었던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데 열중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감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한말에 제정한 <사립학교령>을 개악하여 1911년 10월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으며, 1915년 3월에 그것을 또다시 개악하였다.

<사립학교규칙>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1911년 초부터 초대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지방장관들에게 사립학교들을 새로 설립하지 못하게 지시하였으며, 이미 설립된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내용 및 교원·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를 행하여 식민지 악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거나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낌없이 강제로 폐교시켰다.

일제의 이와 같은 악랄한 탄압책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를 통한 반일민족교육운동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사립학교들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였다. 1910년에 1,973개의 사립학교수가 1912년에는 1,317개로, 1914년에는 1,240개로, 1919년에는 690개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것을 보아도 일제침략자들이 강점 초기부터 각종 악법들을 제정·공포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감행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사립학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도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사립학교를 통한 반일민족교육이 더욱 어렵게 되자 적지 않은 애국적 지식인들은 아직 일제의 주위가 심하지 않았던 서당을 반일민족교육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시기 초기에 많은 서당들이 점차 사립학교와 같이 반일민족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학교와 같이 다수 학동을 수용하고 학년·학기에 의하여 학반을 조직하고 각종 사항을 교수하는 따위의 것은 서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⁷⁾라고 강조하면서 1918년 2월 총독부령 제18호로 <서당에 관한 규

7) 총독부훈령 제9호 <서당 규칙발포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관보》 제1661호, 1918년 2월 2일).

칙>을 공포하고 탄압하였다.

일제는 <서당규칙>에서 반일적인 서당을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당설립에 대한 屈出制를 설정하였으며, 이 규칙에 위반되고 식민지 통치질서를 해치거나 교육상 ‘해롭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도장관이 그에 대한 처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일제는 <서당규칙>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사상과 행동이 ‘불온’한 사람은 서당을 개설하거나 그 교원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서당이 애국적 지식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서당규칙>을 제정하여 서당에 대한 탄압을 단행하였지만 한국인의 민족교육열은 날로 고조되어 오히려 3·1운동 이후 급격히 증가되었다.

〈盧榮澤〉

2. 민족교육의 정비

3·1운동을 겪고 나서 일제는 무단통치방법으로는 한국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위 문화정치를 실시하여 식민통치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전환은 한국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식민통치의 후퇴도 아니었으며 다만 통치방법의 전환일 뿐이었다.

문화정치란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회유책이며 친일과 육성을 통한 민족분열책을 획책한 것이었다. 또 한국인의 열등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교활한 정책이었다.

이에 순응이라도 하듯이 중산층(부르주아지)의 민족주의운동은 위선적인 타협주의에 빠지거나 민족운동의 추진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위장된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개량주의에 매몰되어 민족개조론까지 주장하고 자치론·준비론을 강조하면서 투쟁을 포기하였다.

반대로 농민·노동자들은 민족운동의 전면에 대두하여 반일운동과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주의운

동과 결합된 농민운동·노동운동은 중산층의 민족운동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산층 주도의 운동이나 민중 주도의 운동이나 모두 민족실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경제자립운동과 교육계몽운동에 치중하였다.

중산층은 사립학교를 통한 민족교육과 민립대학설립운동 그리고 민중계몽교육에 치중하고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은 민중계몽교육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중들은 3·1운동과정에서 자아 인식과 자각이 고조되고 제반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고 행동화하게 되었다. 각 계층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중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민족교육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그리고 중산층주도의 운동과 민중주도의 운동으로 분명하게 구분됨으로써 운동의 주체와 운동방식 그리고 목표에서 각기 특성을 갖게 되었다.

1) 문화정치와 교육실태

총독부는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그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종래 총독의 임용이 무관에 한정되었던 것을 바꿔 그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재래의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경찰제도를 채택하고, 관리·교원 등의 제복에 착용하던 대검을 폐지하고—이로써 총독정치의 기본을 순수한 문치주의로 하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시정상의 강령은 ① 치안의 유지, ② 민의의 창달, ③ 행정의 쇄신, ④ 국민생활의 안정, ⑤ 문화 및 복리의 증진 등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일시동인의 聖意(천왕의 의지)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행하고 선량한 민중을 애호함과 동시에 다만, 국헌에 반항하고 병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등의 불령배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없이 단속하는 방침으로 나간다고 하였다.¹⁾ 이렇듯 ‘순수한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첫 번째로 ‘치안유지’를 내걸고, ‘합병의 정신’, 즉 한국을 식민지로서 지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회구하는 것은 반항하는 불령분자로 보아 “추호도 가차없이 단속한다”는 식민지 지배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1)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1935), 314~315쪽.

그리고 통치 실상을 보면 그 기만성과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 확실해진다.

우선 관제개혁에 의해 총독은 형식상 종래와는 다르게 문무관 어느 쪽에서든 임용한다고 했지만, 일제 말까지 모두 무관이었고 문관이었던 예는 없었다. 이것이 이른바 ‘순수한 문치주의’였다.

또한 문화정치기의 통치방식은 무단통치기의 그것과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았고 보다 교묘하게 강화되어진 것이었다. 다른 제 개혁도 행해졌지만, 그 주된 내용은 소위 ‘내선융화’를 내걸음과 동시에 한국인의 일부를 회유하여 이들을 식민통치에 봉사시키는 것이었다. 중추원(총독의 자문기관)에 많은 한국인을 참가시키고, 또 참여관제도(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한국인 참가)를 활용하는 것 등과 함께 소위 ‘민의창달’을 표방하면서 지방제도 개정이 행해졌다.²⁾ 이에 의해서 도평의회·부(시)·면(촌)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극히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선거가 행해졌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도지사·부윤(시장)·면장(촌장)의 자문기관이었다. 그 선임도 도평의회는 실질적으로는 총독의 임명에 의한 것이었고, 부·면 협의회는 선거제였지만 여러 가지 府稅나 面賦課稅를 5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만이 유권자가 될 수 있었다. 때문에 유권자는 1920년에 府·面을 합쳐서 일본인이 7,650명, 한국인이 6,346명에 불과하여 한국의 총인구 1,678만 명 중 극히 일부였고, 특히 한국인 인구 중에서 한국인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도평의회의원의 1/3은 총독이 임명, 그 외는 부면협의회원 중에서 총독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당국을 칭송하는 자를 위한 약간 은급을 주는 정책적 기관에 그치고 말아 교육의 근본방침을 정할 때에도, 산업의 대방침을 세울 때에도, 지조를 일시에 3할이나 올린 때에도 단 하나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선은 일종의 광고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실효 없는 무용지물로 끝났던 것이다.³⁾

이 시기에는 식민지 지배자측으로부터의 ‘교육의 보급과 개선’도 행해졌다. 한국에는 일본인 아동만을 위한 소·중학교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별도의 한국인 아동을 위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

2) 渡部學 저, 김성환 역, 《한국근대사》(동녘, 1984), 146쪽.

3)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학교가 있었다. 공립보통학교에 대해서 보면 1921년의 675개교, 14만 9,965명의 취학자에서 1930년에는 1,639개교, 46만 6,063명의 취학자로 각각 학교수 2.4배, 취학자수 3.1배로 증가했다. 고등보통학교는 공·사립을 합쳐 7개교(1,065명)에서 16개교(4,554명)로 증가했다. 하지만 총인구 48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일본인을 위한 공립중학교가 1930년의 11개교(5,686명), 공립고등여학교가 24개교(7,7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⁴⁾ 이 외에 한국인 생도를 주로 한 실업학교,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 관립전문학교와 한국인 경영의 사립전문학교, 특히 경성제국대학이 창립되었다.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보급개선’의 흔적을 볼 수 있지만 보통학교의 취학률은 1930년에 있어서도 18.5%에 불과했다. 이것은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국인이 매우 빈궁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면과 동시에 일제 공교육에 의한 식민지적 동화교육을 거부하고 민족교육을 지키려는 저항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재래의 서당에서 한문학습을 통해서 은밀히 민족적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든지 또는 야학교 등의 형태에서 보여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정치는 무단정치의 본질적 개선 혹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단정치의 서툴고 노골적인 통치방식을 세련되고 보다 교묘하게 바뀌었던 것에 불과했고 식민지 통치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종래와 거의 다른 점이 없었다. 오히려 종래 이상으로 철저하고 체계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교묘하게 행하기 위해 민족운동의 분열을 위한 각양각색의 수단·술책이 취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일면에서는 성공하여 지주계급·예속부르주아지 등 일부의 소위 ‘친일분자’를 식민지 통치에 협력시켰지만, 진정한 민족주의자·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저지할 수는 결코 없었다. 이리하여 독립운동과 식민지 통치자의 탄압은 서로가 치열하게 대립하여 갔다.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그 국내적·국제적 모순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대륙침략 기지로서 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일이었고 특히 한국에 대한 경제 수탈은 이 시기에 한층

4) 朝鮮總督府 學務局 編, 《朝鮮諸學校一覽》(1937년도).

강화되어 한국인의 몰락은 더욱 촉진되었다.⁵⁾

2) 민족운동의 전환과 실력양성론

3·1운동 후 국내에서의 직접 항일투쟁이 거의 불가능해진 1920년부터 내외의 민족주의자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점진주의’와 ‘급진주의’의 분화가 그것이다. 민족주의 우파를 대표하는 점진주의자는 일본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문화정치를 내건 일본의 새로운 정책에 일단 영합해서 반일운동을 교육진흥·국산품애용 등의 타협적 운동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족주의 좌파를 대표하는 급진주의자는 비타협적인 철저한 투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자의 동요와 분화현상은 완전한 식민통치체제 아래서는 독립운동이 몹시 어려운 점, 그리고 3·1운동의 실패와 베르사유 강화회의·워싱턴군축회의 때의 독립청원운동의 실패에서 온 좌절감, 또는 반일 독립운동의 전략·전술을 에워싼 의견대립 때문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조선의 민족자본이 지니는 정치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민족주의자의 동요와 그것을 이용한 일본의 파괴공작·민족분열정책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민족주의자에 대한 일본의 파괴·분열공작은 격화되어 식민지 체제라는 국내 여건과 중국의 반식민지화, 일본군의 시베리아 점령이라는 국외 여건 아래 강행되었던 것이다.⁶⁾

사실 3·1운동 직후의 단계에서 친일파·예속자본을 빼놓고 민족주의자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비타협적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는 점진주의라는 이름 아래 일본 통치자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는 개량주의노선을 택해 교육·산업·문화의 향상을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실력양성론으로 기울었다.

이 합법적 조직에 바탕을 둔 계몽주의적 운동은 그 목적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지만 해방과 독립을 싸워 차지한다는 것을 것발로 내걸었던 민족주의 본래의 처지로 말하면 일보 후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국이 정치단체를 빼놓고 각종의 이른바 ‘문화단체’를 허

5) 渡部學, 앞의 책, 150쪽.

6)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379쪽.

용한 것은 반일운동의 진정화를 노린 일종의 ‘안전판’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는 이 안전판에만 달라붙어 독립 달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교육·문화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와 같은 개량주의적 경향은 이미 한말에도 있었다. 특히 의병투쟁에 반대한 애국계몽운동계열에서는 교육·문화적 운동에 역점을 둔 비투쟁적 운동방식으로 개량주의에 빠지기 쉬운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문화운동이란 민족해방운동의 하나로서 민족주의자가 외친 것이 아니라, 총독부 권력이 점진적·타협적 요소를 이용하여 민족주의 우파를 지배체제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민중의 치열한 반일·독립의 의사를 대일 타협의 방향으로 유도해서 민족독립운동을 거세시키려고 꾀한 민족분열정책의 하나였다.⁷⁾

문화통치에서 추진한 문화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먼 장래에 기하기 위해 문화적 생활을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즉 식민지 지배체제를 부인하지 않고 식민지배에 대한 정면도전을 회피하면서 문화운동에 치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통치는 기만적이며 무단통치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문화통치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개량주의로 운동노선을 변경(변절)하여 일제를 적대시하는 직접 투쟁을 포기하고 먼 장래의 독립을 위해 문화운동에 치중하는 운동과 일치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가 문화통치를 추진하기 위해 주장한 참정권 획득 청원과 실력양성 그리고 민족성 개조 등 세 가지 강령을 개량민족주의자들이 수용하는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자치론자인 李光洙의 민족개조론·선실력양성론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실력양성운동에서도 민중계몽교육 등 교육진흥운동이 전개되었다.

7) 강동진, 위의 책, 386쪽.

3) 제2차 <조선교육령>과 민족교육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식이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식민지 교육정책도 수정되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정치가 기만적이고 교활한 정책이었던 것처럼 이 시기의 교육정책도 식민지 교육정책을 보다 더 심화시킨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정치는 문화주의라는 외형의 틀속에서 민족말살과 동화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식민지 정책의 틀을 구현하기 위한 융화정책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3·1운동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교육정책도 표면상으로는 변경되었으나 근저에 깔려 있는 동화주의와 황민화정책은 결코 수정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에도 융화정책을 반영시켜 교육제도에 수정을 가하였다. 종래에 저급하게 짜여졌던 학교체계를 고쳐, 일본의 학제와 비슷한 제도로 개편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도 표면상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즉 이것은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려는 유화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시동인·내선일체·내지연장주의 등의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한국 국민에 대한 동화주의 교육을 더욱 본격화해 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공교육체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3·1운동 후 일제의 교육정책은 표면상 한국인의 교육을 일본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놓은 듯이 보이게 했으나, 학교교육의 실재에 있어서는 교묘하게 차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설립의 사립학교 성장을 억제하고, 오히려 동화주의 교육을 더욱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새로 개정된 교육제도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⁸⁾

8)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연세대 출판부, 1971), 169쪽.

- 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로 연장하였다.
- ② 종래 각급 학교에서 폐지되었던 한국어가 필수과목으로 부활하였다.
- ③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
- ④ 새로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의 길을 마련하였다.
- ⑤ 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

또한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학교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인이 취학하는 학교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별도로 두어 전자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라 하고, 후자를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라 칭하게 하였다.
- ②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실업학교는 2~3년에서 3~5년으로 하였다.
- ③ 그리하여 종전에 초등학교에서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11~12년이었던 전체 교육연한이 11~16(17)년으로 연장되었다.
- ④ 실업학교는 보통학교에서 접속하는 3~5년 과정의 중등학교로 하고, 실업보습학교는 4년제 보통학교 수료자를 수용하는 2년제 직업교육기관으로 삼았다.
- ⑤ 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의 학제에 준하였다.
- ⑥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특과사범학교, 관립사범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신설토록 하였다.
- ⑦ 보통학교(6년)에 2년제의 고등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⑧ 이밖에 공립보통학교에 부설학교와 간이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일제가 새로 개악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자 그것을 폭로·규탄하고 논설에서 “생각하건대 조선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까닭이 아니라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을 융합하여 일층 적절히 말하자면 동화하여 혼연한 그 민족을 성하게 하여 일본제국의 영원한 기초를 정하자 함이니… 본 교육령의 입법자가 또한 여차한 심사로써 이 법을 정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순연한 교육 그것을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였으며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되 자유정치의 이상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특

히 제국주의적 이상을 간직한 것이다”⁹⁾라고 본질을 비판하였다.

일제가 개정한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체계는 일반교육체계와 값싼 노동력양성을 위한 특수한 식민지 노예교육체제로 되었다.

일반교육체계는 6년제 보통학교, 5년제 고등보통학교, 3~5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 5년제 전문학교, 2년제 대학 예과,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되었다. 일제가 일부 학제·학년을 늘이면서 일반교육체계를 새로 확대 개편한 것은 식민지정책에 필요한 심부름꾼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이 더욱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요구로부터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향학열에 편승하여 ‘선정’이나 베푸는 듯이 가장하면서 식민지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일반교육체제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일반교육체계는 계급적 차별에 기초한 것이었다. 일제가 ‘조선사람분위’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절대다수의 민중의 자녀들은 학교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었다. 오직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요구에 순종하는 지주 등 부유층의 자녀들만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급적 차별에 따라 우선 일반교육체계의 기층단위인 6년제 보통학교마저 그 설립의 지역적 범위를 극히 제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교육받을 앞길을 열어 준다고 선전하면서도 6년제 보통학교는 큰 도시에 집중시키고 군에 1~2개 밖에 설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4년제 보통학교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두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있던 농민의 자녀들은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교육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제는 또한 학교 입학조건과 진학제도를 새로 규정하였다. 당시 6년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전문학교·대학교의 입학자격을 얻자면 예외없이 재산증명서와 가정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교장 및 경찰서의 ‘평정’이 있어야 하였다. <동아일보> 편집자들은 당시 서울 시내 보통학교의 입학실태를 보도하면서 “비록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라도 재산의 유무를 가려 학비가 충분치 못 한자는 전부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¹⁰⁾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9) <동아일보>, 1922년 2월 10일.

10) <동아일보>, 1921년 3월 27일.

이와 같이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은 보통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1921년에 4년제 보통학교의 월사금은 40전이고 입학비용은 4원30전이었다. 학교경비에 보텔 ‘부과금’·‘후원비’ 등을 제외하고도 학생 1명당 1년간의 학비는 모두 20원 이상이였다. 당시 농민의 1년 평균 수입이 30원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통학교에 보내기가 곤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는 일반교육체계의 보통학교인 6년제 보통학교의 학비를 4년제 보통학교의 학비보다 거의 2배나 높게 함으로써 한국인의 자녀들이 6년제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제한해 놓았다.

새로 개악한 일반교육체계에서는 전문학교나 대학 예과·본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일제의 민족적 및 계급적 차별정책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¹¹⁾ 일제는 <조선교육령>에서 한국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길을 열어놓았으나 실제로는 친일분자나 대지주의 자제 외에는 대학입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한국인에 의한 대학설립은 절대 불허하였다.

〈盧榮澤〉

3. 민족교육운동의 전개

민족교육이란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형성된 근대국가가 민족보존과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히 국난에 직면한 후진사회에서는 자위적 목적으로 모든 민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이 강조된다. 島山 安昌浩는 민족이 죽고 살고 노예되고 독립됨이 판정되는 것은 지력과 경제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교육열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민중 모두 계몽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각계 각층에서 민족교육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1) 박득준, 《조선근대교육사》(한마당, 1989), 244쪽.

문화정치라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3·1운동 이후 각 계층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양양되었기 때문이었다.

중산층 주도의 민족교육운동은 대체로 사립학교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교육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중산층도 참여한 민중주도의 민족교육운동은 서당이나 야학과 같은 비정규의 교육기관을 통한 계몽적 성격의 민중운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일생동안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한 玄相允은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농사에 비유하여 강조하였다. 즉 비록 나쁜 종자라도 말이 좋으면 그 결과는 양호한 것이며 비료를 잘 주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교육의 임무라고 하였다. 교육은 사람의 환경을 개선시켜 우수한 인재를 얻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¹⁾

이처럼 민족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애국지사들과 지도자들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였다.

또는 사립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애국청년들도 많았던 것이다.

1) 사립학교 교육

일제시기에 국내에서의 반일민족교육운동은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립학교교육·서당교육·야학교육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규학교 교육인 사립학교 교육은 여전히 반일민족교육운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말 민족교육운동의 중심체였던 사립학교들은 합방후 일제의 탄압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사립학교에서도 일제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반일애국교육의 합법적 활동이 거의 상실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반일민족교육운동에서 사립학교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약화되기는 했으나 의연히 이 학교들은 그 운동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

1) 현상윤, <우심학적종족개량론>(《동광》 32, 1932년 7월).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일제의 탄압이 있게 된 사실은 일제초기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각 도 장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 사실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학교가 법규를 준수하는가 안하는가, 교원들이 그 직책을 다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교육용 서적은 舊學部가 편찬하였거나 인정하여 허락한 것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왕왕 그 밖의 것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가운데唱歌나 그 밖의 것으로써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또한 제국에 대한 반항을 장려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애당초 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체상 더욱 주의를 요한다(寺內正毅傳記編纂所, 《寺內正毅伯爵傳》, 1920년, 629쪽).

이 시기에는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들은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첫째 부류의 사립학교는 애국적 인사들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것으로서 그 수는 사립학교 총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사립학교들은 처음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반일 애국사상과 근대적 지식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었다. 이러한 학교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 운영자들의 우유부단성으로 인하여 합방후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에 순종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계속 반일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부류의 것은 일제의 합방을 전후하여 일제의 탄압을 모면하려고 그 간판을 종교학교로 바꾸어 단 사립학교들이었다. 그렇지만 이 학교들은 여전히 애국적 지식인들이 주관한 학교들로서 반일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있었다.

셋째 부류의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선교계 학교였다. 이들 선교계의 종교학교는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민족교육도 실시하여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²⁾

사립학교 중에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도 몇 개 있었는데 일제 중기에 설치되어 있던 사립전문학교는 모두 8개였는데 6개교는 개편되거나 신설된 것이고 2개교는 既設의 전문학교였다.

2) 박득준, 《조선근대교육사》(한마당, 1989), 220쪽.

즉 사립전문학교로는 1922년에 각종학교인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개편된 보성전문학교, 1925년에 각종학교인 숭실학교에서 개편된 숭실전문학교와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개편된 이화여자전문학교, 1929년 경성치과의학교에서 개편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930년에 불교전수학교에서 개편된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조선약학교에서 개편된 경성약학전문학교 등이 있었고, 기설의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다.³⁾

2) 민립대학설립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은 물론 실패된 운동이었으나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3·1운동 이전의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에서 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22년 2월 6일 개정·공포된 <조선교육령>에 의해서였다.

소위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칭하는 이 <조선교육령>의 개정된 내용중 핵심적인 것은 한국에서 대학교육과 사범교육의 실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선교육령>에 관한 유고’⁴⁾에서 교육의 쇄신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이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內鮮 공통의 정신에 의해 일본 내지와 동일한 제도하에서 교육시설의 확충과 완비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자에 의하면 총독부 학무국장은 교육령 개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종래의 <교육령>은 그 취지가 한국인을 본위로 한 것이었으나 신교육령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인·한국인 모두 일본 본토의 <실업교육령>·<전문학교령>·<대학령>에 의한다고 하였다.

민립대학설립에 대한 주장이 하나의 실천적 운동으로서 전국적 규모로 전개된 것은 1923년의 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사립대학설립에 대한 주장이나

3) 김영우·피정만, 《최신한국교육사연구》(교육과학사, 1995), 404쪽.

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21년), 7쪽.

관립대학설립에 대한 주장은 있어 왔다. 한말의 애국지사 安重根은 프랑스인 천주교 성직자에게 대학설립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었다. 개신교에서는 일찍부터 선교계의 대학설립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자금문제와 교육개정 이전의 교육령에 대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좌절되었다. 한편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한말 국채보상운동으로 모금된 기금으로 민립대학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법규미비와 총독부의 회피로 실패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설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추진이 본격화되기는 3·1운동 이후의 일이었다.

1921년 5월 교육법 개정을 위하여 구성된 임시교육조사위원회에서 대학설치를 결정하였다. 그 때 한국인측에서도 전국각지의 유지의 이름으로 관립대학설립을 총독부에 건의하였다. 총독부는 1922년 초부터 대학교육 실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1922년 4월 개정된 〈교육령〉을 공포함으로써 대학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추진된 과정을 보면 1922년 2월 《동아일보》가 민립대학설립을 주창하고 1922년 4월 조선청년연합회총회에서 민립대학설립을 주장하여 이것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조선교육회를 모체로 하여 추진되었다. 조선교육회는 1920년 6월에 韓圭高·李商在·兪鎭泰 등 애국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조선교육회는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苦學生學校를 운영하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애국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조선교육회 회원들에 의하여 민립대학 창설이 발기되고 1922년 11월에 이상재를 대표로 하여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결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1923년 3월 29일 서울 종로의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그해 4월 2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상재, 상무위원에 兪星濬·李昇薰·韓龍雲 등이 선출되었다.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그 발기의 목적과 의의를 강조하면서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의 체면, 조선인의 생명보존이 이 대학기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결

코 과언이 아니다. 보라, 이 민립대학은 첫째 민중의 힘으로써 하는 최고학부이며, 둘째 민족의 이상으로써 하는 최고 결정이라. 이 민중에 기본적인 최고학부의 발달로 인하여 조선인민의 과학이 발달할지며 다만 발달할 뿐 아니라 조선민족을 위한 발달이 될지며 실로 조선인 소유의 문화가 될지며 이 민족적 이상의 최고 결정이 그 가치를 발휘함으로 하여 조선사람의 전도방향은 비로소 과학에 기본적인 확실성을 갖게 될지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를 생각하면 민립대학의 기성은 다만 우리들에게 지식을 줄 뿐 아니라 과학에 기본하여 발달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되는 도다. ... 조선민족이 빈하고 약하나 실로 마음과 힘을 합치면 어찌 이 사업을 기성치 못하리오(《동아일보》, 1922년 12월 16일).

발기총회에서 가결된 민립대학창설의 총체적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

민립대학창설의 제1기 사업은 기본금 400만 원으로 부지 5만 평을 사서 교사 10동과 강당 1동을 짓고 교원을 양성하는 한편 법과·문과·경제과·이과의 4개학과를 설치하며, 제2기 사업은 300만 원으로 공과를 신설하고 이과와 다른 과를 확장하며, 제3기 사업은 300만 원으로 의과와 농과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기성회발기총회가 있는 후 전국 백여 곳의 부·군에 지방부가 설치되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되어서 그 열기가 식어지고 용두사미처럼 되어 실패로 끝나버렸다.

이 운동의 실패원인은 무엇보다도 일제의 탄압과 1923년의 대홍수와 같은 재해의 타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였던 것이다.

곧 가장 큰 실패원인은 이 운동의 지도자와 간부들의 희생적인 활동 부족과 열성 부족이었다. 당시로서는 막대한 거금을 모금하고 민중의 자발적이며 희생적인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와 간부들의 절대적인 희생적 활동이 요구되었으나 그들의 실제 활동은 지극히 부진하였다.

또한 이 운동의 추진체력과 운영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그 실패원인이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민족운동 즉 노동공제회 등 기타 단체의 모금된 기금이 행방도 모르게 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민중의 불신을 사게 되어 현금을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지방부는 중앙으로의 송금을 기피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인의 극심한 경제적 빈곤이 실패원인이 되었다. 일제의 경

제침탈정책으로 민중은 극도로 빈곤하였고, 친일적 지주들이나 부호들은 일제의 눈치를 보면서 현금을 기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중산층 주도의 민족운동의 지지기반이 미약하였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3·1운동 후 1920년대는 자각된 민중들이 계층별 사회운동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농민운동·노동운동·청년운동·여성운동·형평운동 등 사회운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적극화되면서 민중들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경제자립운동과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민중계몽교육에 능동적으로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생존권 확보와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문제에 관심이 더 컸던 것이니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1923년부터는 사회주의운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본격화되어 우파민족주의자들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선도적이었던 천도교와 기독교는 민립대학운동에 비협조 내지는 소극적이었다. 3·1운동 후 천도교는 독자적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기독교는 자체의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대학승격 문제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에 호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중산층 주도의 민족운동의 지지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이들 중산층들은 1923년에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힘의 분산과 지지기반의 분산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따라서 중산층 주도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은 그 중심적 지지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모금은 거의 힘든 일이었다. 이 운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금의 모금이었는데 모금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외형적 조직이나 선전에만 치중된 결과가 되어버렸고 이 운동은 실패하였다.⁵⁾

이처럼 이 운동이 실패하는 동안 총독부는 1921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관립대학을 경성제국대학이란 명칭으로 1924년 개교하게 되었다.

5) 노영택, <민립대학설립운동연구>(《국사관논총》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3) 민중계몽 교육운동

(1) 민중교육기관 설립의 배경

민족운동과정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그리고 민족의 주체로 인식된 것은 3·1운동 이후의 일이었다. 특히 申采浩는 3·1운동을 겪으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민중을 발견하였다. 신채호는 1923년 〈조선혁명선언〉에서 민족독립의 방법으로서 민중직접혁명을 선언하고 민중에 의한 혁명이 아니고서는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신채호는 민중을 민족사의 실체적 주체로 인식하면서 민중은 농민·어민·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특히 농민이 민중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일제시대 농민이 전 인구의 9할을 점하였던 점과 3·1운동 이후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대개 개량주의에 매몰된 점을 생각할 때 민중이 민족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일제하에서 민중의 실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제의 가혹한 소작제도와 경제수탈정책에 의해 생활이 파멸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적 측면에서는 극히 무지몽매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빈곤과 무지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운동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민중계몽교육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민중의 무지로부터의 해방과 지적향상을 위해 전개된 운동이었다.

민중계몽교육운동을 담당한 기관은 서당과 야학이었다. 특히 개량서당과 야간 강습소인 야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더욱이 주간에는 가사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문맹 성인과 아동들을 위해서는 야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민중교육기관은 비정규의 교육기관이었으나 일제하의 민중에게는 비중이 크고 보편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일제하에서 사립학교들이 가혹한 탄압에 의해 위축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당교육은 오히려 발전하고 있었다.

원래 서당은 한문을 배워주고 봉건유교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봉건적인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서당교육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제는 식민지시대 초기에는 서당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온존책을 실시하였다가 점차 통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족교육운동을 추진한 주체들은 사립학교의 탄압을 피하면서 일제의 서당 온존책을 역이용하여 서당을 민족교육기관으로 설립·경영하게 되었다. 더욱이 학교 설립 경비와 운영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서당이 유리하였고 농촌 마을마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어 교육보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당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11년부터 1916년에 이르는 6년 사이에 서당의 수는 1만 6,540개로부터 2만 5,486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학생수는 14만 1,504명으로부터 25만 9,531명으로 늘어났다.⁶⁾ 이것은 같은 기간에 서당수는 1.5배 이상, 학생수는 1.8배 이상 각각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서당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당의 반일애국적인 성격의 변화과정을 동반하였다. 이 시기에 설립된 서당들은 대부분이 애국적 지식인들과 민중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서 비록 서당이라는 명칭이었지만 본질상 정규 사립학교와 다름이 없는 반일민족교육기관의 성격을 갖춘 것들이었다. 이처럼 성격이 개량된 서당을 개량서당이라고 칭하였는데,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변신한 개량서당은 종래의 재래 서당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여 근대적인 교육기관과 같이 학년·학기·학급을 구성하고 한문이나 동몽선습 뿐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금지당한 조선역사와 조선지리 과목을 비롯하여 조선어와 산술 등 청소년들 속에서 반일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적 지식을 주는 과목들을 교육했다. 이와 같은 성격의 개량서당들은 근대적인 민족교육기관의 한 형태로서 당시 우리 나라의 반일민족교육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⁷⁾

개량서당과 함께 민족교육운동의 핵심이 된 것은 야학이었다.

이미 한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야학은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면서 급

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8년).

7) 노영택, 〈일제하의 서당연구〉(《역사교육》 16), 1974.

속히 확대되었으며, 일제시기 야학은 노동야학을 비롯하여 농민야학·여성야학 등 다양하였다.

1910년대에 우리 나라에는 전주 제1노동야학, 울산 신화리 노동야학 등 많은 노동야학들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이미 한말부터 설립·운영되어 오던 마산 노동야학, 합천 적중 노동야학과 같은 야학들이 더욱 확장되었다.

마산 노동야학은 1914년 10월에 건평 140㎡에 6개의 교실을 가진 큰 규모의 야학으로 확대되었으며 야학생의 수도 수백 명에 달하였다. 당시 노동야학의 야학생 규모는 보통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 정도였으며, 전주 제2노동야학과 같이 규모가 큰 노동야학은 200명 이상의 야학생들을 수용하였다. 또한 적지 않은 노동야학들은 그 학제도 정규적인 사립학교의 것을 따랐다.⁸⁾

이와 같이 일제시대 민족교육운동은 사립학교 뿐 아니라 서당·야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청소년학생들에게 반일애국사상을 심어주며 민족자주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내용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민중교육기관이 꾸준히 설립된 역사적 배경은, 첫째로 정규교육기관의 부족, 둘째로는 빈곤한 민중의 취학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교육비 부담이 컸으며 아동들도 노동현장이나 가사에 종사해야만 했던 생활상태 그리고 이미 취학의 기회를 상실한 문맹성인들을 위해서는 서당이나 야학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셋째로는 3·1운동 이후 민중의 자각과 교육열이 크게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민족운동전개과정에서 주도세력들이 민중계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섯째로는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열화같이 전개된 청년운동·여성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형평운동 그리고 사회주의운동에 의해 농촌계몽운동·문맹퇴치운동 등 민중계몽 교육운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신교·천주교·천도교·불교 등 각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민중계몽에 주력했기 때문이었다.⁹⁾

일제 경찰당국도 한국인들이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열이 급격히 발흥하였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수용력이 태부족하여 야학과 같은 민중교육

8) 박득준, 앞의 책, 223쪽.

9) 노영택, 《일제하 민족교육운동사》(탐구당, 1979), 189~190쪽.

기관이 설립되었다고 하였다.¹⁰⁾

《동아일보》는 “금일의 상태하에서는 농촌에 있어서 보통학교의 증설도 필요하지만 서당·강습소·야학 등의 시설도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1면 1교가 되어도 교통관계로 통학이 불능인 경우가 많고, 경제관계나 학령을 초과한 관계, 학교수용력의 부족때문에 이같은 보조교육기관의 필요를 통감하게 된다”¹¹⁾고 하였다. 즉 교육시설의 부족, 학령을 초과한 성인, 경제적 빈곤 그리고 통학거리가 먼 농촌의 경우에는 민중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1운동 후 1920년대에는 민족실력양성운동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중산층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만 민족독립운동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민중이 민족의 중심이 됨을 인식하여 민중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3·1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된 민중은 스스로 실력을 향상시켜야만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향상이 가능하다고 자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민족독립도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전반적으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주요과제는 실력향상이었는데, 이 실력향상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경제자립과 지적 무지몽매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지적·교육적 향상 등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계층의 사회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한 선결과제로 삼았던 것이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민중계몽교육이었다. 특히 농민층·노동자층의 자각이 고양되어 민중의 교육열이 고조되었다. 교육열은 고조되었으나 반면에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은 부족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 각종 형태의 민중교육기관 설립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야학·농민야학·여성야학·각종 강습회·개량서당 등 비정규의 민중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미취학 아동은 물론 취학의 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중교육기관의 설립주체는 각 종교단체와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10)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43쪽.

11) 《동아일보》, 1932년 5월 15일, 社說.

지방유력자나 부락공동인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농민들이 부락공동으로 개량서당이나 야학을 설립·운영하였고, 뜻을 가진 지방유력자나 열성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민중계몽교육에 앞장섰던 것이다.¹²⁾

조선농민사를 통해 천도교 농민운동을 주도한 李晟煥은 민족운동이나 실력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크게 성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결국 농민의 의식화와 각성없이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농민계몽교육 즉 문맹퇴치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성환은 1927년 교육주간을 맞아 문맹퇴치운동이 고조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대중에 대한 문맹퇴치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¹³⁾

1927년 함흥지방의 농민교육자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조선농민사의 한장경도 “오랫동안 남에게 속아 살고 놀려 오던 농민대중은 이제야 눈을 뜨고 살길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첫걸음으로 문맹퇴치의 필요를 느끼고 야학을 세우게 되었다”¹⁴⁾고 하였다.

조선농민사는 1928년 1월호의 〈社告〉에서 “농민의 문맹퇴치에 일층 더 주력하기로 함”이라고 하였다.

김도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농촌계몽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것이다. 글자 모르는 농민에게 먼저 우리의 피와 살인 알기 쉬운 우리 글을 배워주어서 한사람도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¹⁵⁾라고 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이 시대는 민중의 시대이다. 우리 조선 민중도 이 길에 함께 나서자면 먼저 문자를 알아야 한다. 문자 모르는 사람은 장님과 일반이다”¹⁶⁾라고 부르짖고 있었다. 또한 “우리는 力を 양하자. 오직 力이다. 力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또 배우자. 신조선 건설의 기초공사는 노동자와 농민의 문맹을 퇴치함에 있다”¹⁷⁾고 하였다.

12) 노영택, 〈일제시기의 문맹률 추이〉(《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13) 《朝鮮思想通信》, 1927년 12월 22일.

14) 《조선농민》, 1927년 12월호.

15) 《조선농민》, 1929년 3월호.

16) 《조선농민》, 1930년 1월호.

김병순은 “농민들이 그 생을 보지하며 그 명을 유신케 함에 당하여 지식을 계발치 아니하고 활로는 타개될 수 없는 것이니 문맹지옥의 타파는 얼마나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가”¹⁷⁾하고 부르짖었다.

천도교 농민운동 지도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농민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시급한 선결과제는 이들의 문맹을 타파하여야 그들의 의식화와 각성이 가능하고 그때 가서야 농민운동이니 지위향상이니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2) 민중교육기관의 성격

일제하 서당은 본래 서당의 전통적 기능인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계승·발전시켰다. 특히 개량서당은 교과내용이나 교사의 질에 있어 근대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한편 야학에서는 근대교육을 받은 청년지식인들이 근대적 교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교과내용에서 보아도 근대학교와 같은 교과를 설정하여 시대에 맞는 초등교육의 기능을 유지했다.

이들 서당과 야학에서는 당시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먼저 조선역사·조선지리·조선어 교수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일제는 한국사람들의 민족의식을 영원히 말살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따라서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식민지악법에 저촉되어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조선역사와 조선지리 수업은 일제의 눈을 피해가면서 비밀리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함경북도 경성의 사립 온천학교에서는 비밀리에 우리의 역사와 지리를 교육하였는데, 1916년의 함경북도 경무부 비밀자료에는 이에 대하여 “지금 학생들에게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는 ‘조국생각가’와 安重根을 찬양한 몇 수의 불온 창가 및 불온 사상을 담고있는 《조선사》·《대조선사》 등의 교재들과 불온하기 때문에 발행이 금지된 《초등본국역사》·《초등본국지리》 등을 발견

17) 《조선농민》, 1930년 5월호, 농민독본 선전문.

18) 《농민》, 1933년 11월호.

하였고 학생잡기장에 ‘조선어를 읽으라’고 표제한 불온 문서를 필기한 것을 발견하였다”¹⁹⁾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조선역사와 조선지리의 교육을 통한 반일애국교육은 사립학교에서는 물론 서당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 방법의 하나였다.

당시 전라남도 경무부장의 자료보고를 통해서도 서당에서의 교육내용을 엿볼 수 있다. 즉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면의 한 서당교사가 《봉성진 및 문선 언죽기》라는 책을 교재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일 제침략자들을 반대한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崔益鉉 등 애국적 유생들의 민족적 절개를 따를 것을 호소한 내용들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등 조선 침략원흉들이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만행을 신랄히 폭로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었다고 하였다.²⁰⁾

한편 사립학교·서당·야학 등 초등교육기관에서는 한글을 교수하기 위한 조선어교육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미 일제강점 전에 출판된 《유년필독》·《초등국어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어책들을 가지고 교육하였다. 그리고 사립중등학교에서는 周時經이 쓴 《말의 소리》·《국어문법》 등에 대한 교수를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에 의한 민족어 탄압책동이 노골화되었던 조건에서도 순수한 민족어를 지켜나가는 데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²¹⁾

또한 이 시기 반일민족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된 방법의 하나가 애국적인 창가보급이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국가의 성쇠는 국민정신에 달려있고 국민정신을 함양시키는 데는 가곡이 제일이라고 여겨 학생들에게 애국창가를 비밀리에 보급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당시 일 제 강점자들이 각급 학교들에서 창가수업을 ‘친황주의’를 설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던 조건을 역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애국적 창가를 보급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애국창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비밀리에 애국창가집을 편찬하는 데 적극 힘썼다. 그리하여 개성의 한영서원

19) 姜德相, 《現代史資料》 25(みすず書房, 1966), 15쪽.

20) 姜德相, 위의 책, 18쪽.

21) 박득준, 앞의 책, 227쪽.

을 비롯하여 여러 학교들에서 창가집이 비밀리에 출판되어 학생들 속에 널리 이용·보급되었다.²²⁾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사립학교와 서당 그리고 야학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일애국교육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과 민중들에게 반일정신과 애국심을 키워줄 수 있었다.

그리고 민중교육기관이 민족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조건은 서당이나 야학 교사들의 의식과 그들의 언동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36년 2월 1일자를 보면, 입학문제 좌담회 석상에서 김태영이 언급하기를 당국이 서당의 경영자 또는 교원이 부적하다는 이유로 서당을 많이 폐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서당의 경영자와 교사들의 민족의식이 서당교육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에 본부를 둔 신흥종교단체인 만인교 교주 정창선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량서당을 개설하여 민족독립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²³⁾

3·1운동에 참가한 서당교사와 학생들의 사례도 많았는데 황해도의 경주 신천군 용천에 있는 기독교회 부속의 서당학생들이 만세시위를 기도하다 체포되었고 재령군 청석두의 기독교도와 서당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벌렸다.²⁴⁾

또한 평안북도 용강군 해운면에 거주하는 서당교사 김정식도 태극기를 만들어 사당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세를 부르게 했다.²⁵⁾

(3) 민중교육운동의 주체

민중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민중교육운동의 주체는 첫째 각 종교단체, 둘째로 청년단체, 셋째로 형평운동단체, 넷째 농민운동단체, 다섯째 노동운동단체, 여섯째 여성운동단체, 일곱째 부락공동이나 지방유지, 여덟째는 민

22) 姜德相, 《現代史資料》 15(みすず書房, 1966), 10~17쪽.

23) 慶尙北道警察部, 앞의 책, 76쪽.

24) 姜德相, 앞의 책(1966b), 337쪽.

2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資料集》 5(1966), 820쪽.

중계몽교육에 뜻을 가진 개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는 한말 개화기부터 수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발전에 기여하였거니와 일제하에서도 정규사립학교 뿐 아니라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민중계몽에 앞장섰던 것이다.

교회는 자신의 조직력과 인적자원·물적자원을 동원하기에 유리했고 교회당이나 부속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 민중교육기관의 운영이 용이하였다.

천주교도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민중계몽교육에 힘썼다. 평양의 교구장 홍용호 신부(1943년 평양교구장에 취임하여 1944년 주교가 됨)는 일제하 천주교의 문맹퇴치운동의 성과와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가장 한심한 것은 읽을 능력이 있으되 읽기를 게을리하는 것과 또한 읽을 능력이 없는 문맹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다. 문맹들은 참으로 가련한 자이다. 가톨릭에게 동정심이 있다면 먼저 저들을 향하여 동정하여야 할 것이요, 우리에게 구제사상이 있다면 먼저 저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아! 모르는 이들이여, 배워라. 가톨릭 식자들이여, 가르치라! 이것은 그대들의 가장 신성한 사도직이다. 각 교회와 집회에서는 문맹퇴치의 기관을 설립하라. 각 성당, 각 공소, 각 동리에는 반드시 언문학교부터 먼저 시작하라(《가톨릭연구》, 1934년 2월호).

홍용호 신부는 선교의 선행사업으로서 문맹퇴치와 계몽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민족사회의 시대적 당면과제였던 문맹퇴치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천도교는 3·1운동 후 문화운동에 주력하였는데 3·1운동 후의 국내 민족운동이 민족실력 양성운동·문화운동·사회운동·교육운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도교도 이와 같은 성격의 민족운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특히 천도교는 농민운동에 큰 비중을 두고 농민계몽·문맹퇴치에 주력했다.

이처럼 각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부락공동 혹은 개인이 야학·강습소·개량서당 등 수많은 민중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문맹퇴치와 민중계몽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1920년대에는 청년운동이 전국 각처에서 고조되었다. 각지에서 청년단체의

조직이 경쟁적으로 있게 되어 각종 청년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지방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단체의 청년단체들이 수없이 조직되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각종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민중계몽·문맹퇴치를 위한 민중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이었다. 청년단체들은 당시 민족의 시대적 선결과제였던 민중의 문맹타파와 계몽을 위해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설립·운영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청년 스스로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청년회관이나 기타 건물을 이용하면 용이하였기 때문에 청년단체들은 거의 예외없이 민중계몽교육·문맹퇴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12월에 창립된 조선청년연합회 헌장에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행하는 가운데 강습회 또는 야학을 개최하고 청년취학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²⁶⁾

청년운동 못지않게 노동운동에서도 문맹퇴치 활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강조된 것이 노동자의 계몽을 위한 사항이었다.

1920년 4월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로 조직된 조선노동공제회는 노동사회 개선의 목적을 위해 첫째로 지식계발을 실천사항으로 주장하였다. 무지몽매한 노동자들의 계몽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고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경제사정으로 학교에 취학시킬 수 없어 이들을 교육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것은 단순히 농민의 문제라기보다 전민족적 문제였던 것이다.²⁷⁾ 정종명은 〈농민의 문맹퇴치〉라는 제목으로 《조선사상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무산대중의 계급적 해방운동이 중요하다. 무산무식한 조선농민을 훈련하는데 최대의 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문잡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문맹퇴치해야 한다”²⁸⁾라고 주장하였다.

임병천도 80% 이상의 농민 대부분이 문맹이니 농민의 문맹타파를 위해

26) 《매일신보》, 1920년 12월 2일.

이돈화, 〈조선청년 연합회의 성립에 취하여〉(《개벽》, 1921년 1월호).

27) 노영택, 앞의 글(1994).

28) 《朝鮮思想通信》, 1928년 1월 30일.

농민야학·여성야학을 설립하고 농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²⁹⁾

일제시기 서당과 야학 등 민중교육기관은 민중계몽과 실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서당과 야학에 의한 민중교육운동은 민족교육운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규사립학교는 학교수가 제한적이었고 도시중심적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중교육기관은 9할이 농민이었던 일제시기에 전국 보편적 민중교육기관이었고 민족주의교육에 기여할 수 있었다.

공립학교에서는 지적교육은 우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민중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중교육기관의 교육과는 비교될 수 없었다.

3·1운동 후 민족의 주체이며 역사의 주체로 등장된 민중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킨 것은 민중교육운동의 공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다음 표는 각종 초등학교와 서당의 통계표인데 일제시대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야학은 공식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911년~1942년)

년도별	공립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사립 각종학교 (일반 종교)		총학생수(명)
	교수(명)	학생수(명)	교수(명)	학생수(명)	교수(명)	학생수(명)	
1911	152	21,842	54	2,428	2,085	?	?
1912	342	41,063	25	2,021	1,323	55,313	96,376
1913	366	47,066	18	1,646	1,285	57,514	104,520
1914	382	50,753	20	1,834	1,214	53,885	106,472
1915	410	58,757	17	1,436	1,090	51,725	111,918
1916	426	65,653	19	1,489	973	48,643	115,785
1917	435	73,157	24	2,055	827	43,643	118,855
1918	469	76,061	36	3,613	780	35,197	114,871

29) 《朝鮮思想通信》, 1929년 3월 26일.

30) 노영택, 앞의 책, 126쪽.

년도별	공립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사립 각종학교 (일반 종교)		총 학생수(명)
	교수(명)	학생수(명)	교수(명)	학생수(명)	교수(명)	학생수(명)	
1919	535	76,918	33	3,295	698	34,975	115,188
1920	641	102,024	38	4,819	661	51,008	157,851
1921	755	152,305	36	6,308	625	57,074	215,687
1922	900	228,674	44	8,373	653	71,157	308,204
1923	1,040	293,318	56	11,643	637	68,443	373,404
1924	1,152	332,222	63	11,634	628	68,520	412,376
1925	1,242	365,741	78	17,102	583	55,622	438,465
1926	1,309	387,747	81	18,070	573	49,795	455,613
1927	1,395	400,037	81	19,460	550	46,248	465,745
1928	1,463	409,584	81	19,803	533	47,908	477,295
1929	1,620	420,608	78	19,966	508	47,689	488,263
1930	1,750	436,475	79	21,041	489	47,422	504,938
1931	1,860	445,813	80	21,827	461	45,647	513,287
1932	1,980	470,074	82	23,563	446	46,122	539,759
1933	2,291	606,446	83	26,645	457	57,274	690,365
1934	2,403	679,909	86	29,864	430	62,927	772,700
1935	2,546	759,790	87	33,017	412	70,128	862,935
1936	2,692	842,247	85	35,086	394	75,027	950,360
1937	2,776	946,743	92	39,793	393	80,352	1,056,888
1938	2,878	1,081,908	100	45,000	357	77,722	1,204,630
1939	3,005	1,242,017	117	51,754	335	75,989	1,369,760
1940	3,129	1,407,695	134	57,878	300	69,981	1,535,554
1941	3,252	1,589,106	145	63,548	284	69,745	1,722,399
1942	3,360	1,794,291	141	63,454	252	54,323	1,912,068

*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거(노영택, <일제하의 서당연구>, 《역사교육》 16, 1974 ;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98~99쪽에서 재인용).

〈표2〉

서당 누년 통계표

(1911년~1942년)

년도별	서당(개)	직원수(명)			생도수(명)		
		남	녀	계	남	녀	계
1911	16,540	16,711	—	16,771	141,034	570	141,604
1912	18,238	18,435	—	18,435	168,728	349	169,077
1913	20,268	20,807	—	20,807	195,298	391	195,689
1914	21,358	21,570	—	21,570	203,864	297	204,161
1915	23,441	23,674	—	23,674	229,028	522	229,550
1916	25,486	25,831	—	25,831	258,614	917	259,531
1917	24,294	24,507	13	24,520	264,023	812	264,835
1918	23,369	23,590	23	23,613	260,146	829	260,975
1919	24,043	24,173	12	24,185	275,261	659	275,920
1920	25,492	25,602	19	25,621	290,983	1,642	292,625
1921	24,195	24,507	24	24,531	295,280	2,787	298,067
1922	21,057	21,663	36	21,699	275,952	4,910	280,862
1923	19,613	20,240	45	20,285	251,063	5,788	256,851
1924	18,510	19,067	34	19,101	226,430	5,324	231,754
1925	16,873	17,347	43	17,390	203,580	4,730	208,310
1926	16,188	16,524	41	16,565	192,241	4,597	196,838
1927	15,069	15,485	24	15,509	184,541	4,719	189,260
1928	14,957	15,429	40	15,469	186,195	5,477	191,672
1929	11,469	11,885	23	11,908	157,066	5,181	162,246
1930	10,036	10,477	73	10,550	144,913	5,979	150,892
1931	9,208	9,527	67	9,594	140,034	6,867	146,901
1932	8,630	8,939	70	9,007	134,639	8,029	142,668
1933	7,529	7,889	75	7,964	137,283	10,822	148,105
1934	6,843	7,997	111	7,408	139,381	14,303	153,684
1935	6,209	6,766	110	6,876	142,468	19,306	161,774
1936	5,944	6,455	88	6,543	147,558	22,441	169,999
1937	5,681	6,110	101	6,211	145,365	27,421	172,786
1938	5,293	5,724	108	5,832	142,055	30,401	172,456
1939	4,686	5,099	140	5,245	129,967	34,540	164,507
1940	4,105	4,599	156	4,755	121,837	36,483	158,320
1941	3,504	3,941	156	4,097	111,240	38,944	150,184
1942	3,052	3,556	173	3,729	106,033	47,751	153,784

〈盧榮澤〉

4. 민족교육의 수단

1) 침략전쟁과 황국신민화정책

1931년 만주를 침략하여 그곳을 지배하게 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황국신민화정책 즉 황민화정책을 강행하였다.

황민화정책이란 한마디로 조선인을 ‘황국신민’ 즉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총칭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 정책은 신사 참배, 궁성 요배, 국기 게양, 〈황국신민서사〉 제창, 기미가요 보급, 일본어 보급, 지원병제도의 실시,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창씨개명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1938년 2월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 1938년 3월의 〈조선교육령〉 개정과 1940년 2월부터 시행된 창씨개명 등 세 가지였다. 이것은 1936년 8월 관동군사령관 육군대장 미나미 지로가 조선총독에 취임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 강행된 것이다.

특히 〈조선교육령〉 개정은 황민화정책을 영구히 강행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중심체가 되었다. 〈조선교육령〉 개정에 앞서 1937년 10월 2일 일제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하여 항시 그것을 제창하도록 강요하였다. 〈황국신민의 서사〉는 일반 및 상급학교용과 소학교용 두 종류가 있었는데 소학교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한 썩썩한 국민이 됩니다.

소학교용 쪽에 제정의 의도가 보다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어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소학생시절부터 매일 아침 이것을 제창시켜, 뇌리에 문자 그대로 주입시켰던 것이다.

다음에 징병제도를 향한 포석으로서,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다(〈해군지원병령〉은 1943년). 이것은 물론 일본군의 부족 병력 보충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그것이 ‘사상동원’, ‘내선일체’의 대중적 운동으로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황민화교육은 황민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2) 황민화교육과 민족교육의 수난

황민화교육은 한국인을 일본인화하여 침략전쟁의 도구화하려는 목적으로 강행된 것이었다.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 황민화정책의 주요과제였기 때문에 황민화교육에서는 민족말살을 위한 온갖 방법이 강구되었다.

황민화교육의 추진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1938년 3월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고, 각급 학교의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학제를 개편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인 학생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일본어·일본역사·수신 등의 교과를 강화하는 반면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약화시킴으로써 황민화교육을 강화하고 동화주의 교육을 그들의 군사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대에 이르러 황국신민화 교육의 군사체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전체주의의 이념과 군국주의 체제하에 총력전시체제화 교육이 강조된 군국일본의 정책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추진키 위해 조선총독부는 1943년에 또 다시 〈조선교육령〉(제4차)을 제정하였던 것이다.¹⁾

황민화교육정책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난을 당한 것이 사립학교였다. 왜냐하면 이때의 사립학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제의 교육정책에 맞서 나름대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제가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가한 탄압책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1) 김영우·피정만, 《최신학국교육사연구》(교육과학사, 1995), 431쪽.

- (1) 사립학교의 개폐 :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의 교육목적과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민족주의 색채가 농후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개편토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남궁억이 설립 운영하던 모곡학교를 공립 학교로 개편하고, 조선어학회사건(1942)으로 학교장이 검거된 경상북도 김 천중학교를 공립으로 개편하였으며, 보성·연희·이화·숙명 등의 사립전문 학교가 개편되었다.
- (2) 한국인 교원의 축출과 일본인의 지도권 장악 :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의 한국인 교장을 축출하고 대신 일본인 교장을 두거나 일본인을 교두로 삼게 하여 이들 일본인이 학교의 실권을 잡고 학교를 그들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교당국은 일본인 시학관을 수시로 사립 학교에 파견하여 사립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을 감독하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연희전문학교에 일본인 교장을 파견하고,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일본인 교두를 파견하였으며, 오산중학교에도 일본인 교장을 파 견하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한일인 공학원칙을 명분으로 하여 신설되는 사립학교에는 반드시 일본인 교장을 두도록 하였다.
- (3) 교명 변경과 사립학교의 설립 불허 : 조선총독부는 특정 사립학교에 대해 민족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이유를 붙여 교명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구의 信明학교는 南山으로 교명을 바꾸고, 원산의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가 향도고등여학교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원칙 적으로 불허하였다,
- (4) 재단법인 조직 강요 : 조선총독부는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단기간내에 재 단법인을 조직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교는 폐쇄한다고 위협하 였다. 이는 사립학교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션계 사립학교 와 민족주의적 사립학교를 통제하려는 데 그 근본 의도가 숨어 있었다.
- (5) 신사참배 강요 : 조선총독부는 선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 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강력히 응징하였다.

이 결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숭실전문학교·숭실중학교·숭의 고등여학교·신성학교·보성여학교·계성학교·신명여학교·명신학교·신흥 학교 등 장로교 계통의 선교학교들이 폐교되었다.

〈盧榮澤〉